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적신호 걸렸다	1
강원도민일보	02면	"국회 공청회 무산 시 특별자치도 빈껍데기 출범 우려"	1
강원도민일보	03면	정부 '벽' 허물수 있을까... 강원 정치권 시험대	2
강원도민일보	03면	정부·환경단체에 막히고 '충북 정치력'에 밀렸다	3
강원도민일보	03면	4월 입법무산 책임 '준비늦은 강원도'에 화살	4
江原日報	01면	강원특별자치도 '빈껍데기' 출범 우려	5
江原日報	02면	“ 특별법 공청회 연기 도민 염원 무시 처사 ”	6
江原日報	02면	“ 6월11일 전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	7
KBS 춘천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공청회 조속 개최 촉구 ”	8
연합뉴스		권혁열 강원도의회 "4월 중 강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촉구"	9
CBS	온라인	소외 극복 '강원특별법' 또 소외	10
G1방송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범추협 "법안 심사 조속 촉구"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할 ...	12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13
江原日報	21면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13
연합뉴스		박정하 의원, 원주서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 첫 개최	14
江原日報	10면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개선 공사 이달 중 착수	15
강원도민일보	10면	부안초 통학로 인도 설치 이달 착공	15
춘천MBC	온라인	춘천 불안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 공사 착수	16
연합뉴스		교통혼잡에 '안전사고 우려'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개선	17
CBS	온라인	"안전한 등하교" 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협력 '성과'	18
노컷뉴스	온라인	"안전한 등하교" 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협력 '성과'	19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추경 심의	20
江原日報	03면	태양광 경관 저해 논란 춘천 봉어섬 현지 시찰	20
강원도민일보	04면	도의회 "김 지사 골프연습 논란, 보좌진 직언 부족 문제"	21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여성 100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힘 모은다	21
강원도민일보	01면	윤 대통령 "강릉산불 피해복구 지원 만전"	22

강원도민일보	02면	피해조사 24일 완료 · 200억원 긴급 투입 소상공인 지원	22
강원도민일보	02면	"멀리서 · 가까이서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23
江原日報	02면	도내 전신주 지중화율 10.6% 전국 평균 절반	24
The JoongAng	20A	“ 산불 피해 도우려면 관광 와달라 ” 강릉 횃집 사장의 호소	24
강원도민일보	06면	교원 수 감축 계획 논의 강원도내 교육계 반발	25
강원도민일보	06면	도교육청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25
江原日報	04면	정순신 청문회 여파 도교육청 홈페이지 비판 쇄도	25
강원도민일보	10면	춘천 교육도시 연계 WT본부 유치 사활	26
江原日報	16면	철원 올 상반기 선수단 1만2천명 온다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이재민 건강 관리 만전을	28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특별자치 하지 말라는 것인가	29
江原日報	19면	[사설] ‘ 강원특별법 ’, 자치도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30
江原日報	19면	[사설] 청소년 27.3% 우울증 경험, 어른들 잘못은 아닌가	31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1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적신호 걸렸다

국회 소위 내일 강특별 심의 불발
내달 초 공청회 5월 본회의 처리
도, 한달 내 각종 절차 무리 지적
여야 정치권 대립 속 진행 미지수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정부부처의 부정적 의견(본지 3월27일자 1·3면)이 계속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도 불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 심사와 공청회까지 5월로 미뤄져 자칫,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당초 19일 강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충북도의 현안인 중부내륙지역특별법을 우선 논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행안위 야당간사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제1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과 만나 "강원도가 준비(가) 좀 늦었다. 솔직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약속이행을 위한
국회는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 최양희) 회원들은 17일 한림대 도헌글로비스를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조속 개최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히, 본인들 준비 늦어놓고선 자꾸만 국회 탓만 하면 안 된다"고 강원도 책임론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5월 초 공청회와 행안위 전체회

의,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가는 일정이면, 5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소위원장의 말대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하는 등 책임공방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이 각 현안을 놓고 첨예

하게 대립, 기존 계획대로 상임위 일정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강특별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안위 심사가 당장, 다음달로 미뤄지면서 강원소위원회 불거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제1공약이고, 지난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의 강원 공통공약이었다. 지난 달 30일 도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정부지원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위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입법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정작 국회 심사는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진태 도지사는 "공청회가 5월로 넘어가면 본회의까지 가는 데 무리"라며 "6월 초에는 본회의의 일정이 없다. 국회의 일정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9일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기로 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회를 성토했다. 또, 강원 49개 사회단체도 특별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은·이세훈 ▶ 관련 기사 2·3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국회 공청회 무산 시 특별자치도 빈껍데기 출범 우려"

범추협 조속개최 촉구 성명발표
"도민 실망·허탈감 누가 책임지나"
도의회·국회 당당 심사총력 다짐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를 비롯해 강원도 정치권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이하 범추협)

는 17일 위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춘천 한림대 도헌글로비스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조속 개최를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범추협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의 범국민적 여론 결집을 위해 도내 경제계, 학계, 언론계, 출향인사, 시민 등 300여명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범추협은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했다"며 "그러나 19일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

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기약 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해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청회가 무산되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 무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300만 강원도민의 실망과 허탈감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강원도의회와 국민의힘 강원도당 등

도 정치권도 전부개정안 심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권혁열 도의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내륙지역특별법 논의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정안은 그동안 이중구조로 피해를 본 강원도가 겨우 발전의 기회를 갖는 장치"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은 '지역 형평성'

때문에 충북 지역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대표발의 허영) 심사 및 공청회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중부내륙지역특별법" 논의 일정으로 인해 미뤄졌다.

이설화 lol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3면

정부 ‘벽’ 허물수 있을까... 강원 정치권 시험대

출범 50여일 앞 국회 문턱서 표류
지역 의원 역할에 특자도 명운 결정
행안위 심사지연 여야 ‘네탃 공방’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50여일 앞두고 특례조항이 담긴 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정당을 설득해야 할 강원정치권의 역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방·환경·산림·농림 분야의 권한이양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지역국회의원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은 본회의 의결을 위한 중간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지연을 둘러싸고 ‘네탃 공방’을 벌이고 있어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회 내 다수

당이자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소극적인 입법추진 과정을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에서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국회 의사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 행안위 간사가 강원특별자치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차일피일 지연하고 있어 전체적인 일정이 꼬이고 있다”며 “5월초라도 공청회 열고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시키면 5월말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정부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명확히 해야 공청회도 열고 그 내용을 놓고 법안심사도 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와 동의의견이 반영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면 국회 일정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3면

정부·환경단체에 막히고 ‘충북 정치력’에 밀렸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왜 표류하나

김 부지사 “원포인트 개정” 강조
정부 80% 부정적 ‘사실상 반대’
환경단체 반대에 국회도 주춤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총괄하고 있는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전부개정안 상정부터 걱정이 앞섰다.

김 부지사는 올 초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시간적으로 여차피 원포인트 개정”이라며 “이를 살리려면 강원도가 반드시 답아야 할 내용만 핵심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 표현을 빌리면 6월 11일까지 강원도에 남아 있는 시간은 딱 한 차례였던 것이다.

그 딱한 차례 기회를 강원도는 4월이 내로 못박았고 국회는 이를 도외시켰다. 강원도의 4월 입법은 일리가 있었다. 4월에 행안위를 통과해야 5월 본회의 통과, 6월 출범 식으로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

강원도는 이에 앞서 4대 규제 개선을 전부개정안에 담았다. 군사규제와 환경, 산림, 농업 등 4대 분야에 걸친 방대한 양이었다. 강원도와 도출신국회의원들은 소속정당과 정부, 국회를 향해 규제개선의 당위성과 법개정의 시급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그러나 강원도와 도출신의원들의 활동은 정부와 국회의 완강한 기득권 앞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80% 이상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신중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반대 의견이었다. 한덕수 총리가 “과감하게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의 특례조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사실상 구두선으로 들리는 상황이다.

정부의 반대와 함께 이번에는 환경단체까지 들고 일어났다.

국내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생태 파괴와 난개발 조장으로 강원도 환경을 재앙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제동을 걸었다.

도지사에게 규제완화에 필요한 권한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국회가 이를 흘려 들으려 없었다. 국회 입장에서 정부의 반대와 시민사회 단체의 부정적인 의견을 뚫고 법안 통과를 시킬 이유가 없었던 셈이다.

더욱이 특별법 관련 해당 상임위원 행정안전위 소속 정우택(청주) 국회 부의장이 버티고 있는 충북도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미리 상정돼 있었다. 강원도와 충북은 힘의 논리에서도 밀린 것이다.

결국 강원도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강원도민들이 요구한 각종 규제완화 등 핵심내용은 다 빠진 허울 좋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법안 자체를 포기할 것인지로 요약되는 것이다.

김교흥 행안위 제1소위원장 말대로 “제주도도 지속적으로 법개정을 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단계론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카드였던 원포인트 기회조차 놓친 강원도 입장에서 선택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 시간은 결국 국회 편이 돼버렸다.

이세훈 sehoon@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3면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교흥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세훈

4월 입법무산 책임 '준비 늦은 강원도'에 화살

김교흥, 이광재 면담 자리서 강조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장은 17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만나 4월 입법무산의 책임을 '준비가 늦은 강원도'에 화살을 돌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충북 현안인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수차례 강조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후순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 대표 발의된 법안이고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은 작년에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진행해 지원법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에서도 해당 지원법에 대한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19일 소위에서는 형평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중부내륙발전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수정 대안' 얘기도 있다'고 법안처리방향을 묻자 김 위원장은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 상당 부분 반영이 되게끔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4월 처리가능성'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 등 때문에 4월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5월에 소위원회 차원에 약식 공청회를 열어 처리하려고

한다. 국회에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언론에선 "출범하기 전에 그냥 빈 껍데기로 시작하면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의 위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빈 껍데기가 아니다. 상임위가 끝나면 다 잘 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 동의만 잘 되면 우리 국회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일부러 안 하거나 민주당이 그런 거 절대 아니다"며 "이광재 총장이 있고,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 저한테 전화 많이 온다. 그 정도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대해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강원도가 준비 좀 늦었다"며 "솔직히, 본인들 준비 늦어놓고선 자꾸만 국회 탓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 김진태 지사 등 강원도 책임론을 제기,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이세훈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1면

강원특별자치도 ‘빈껍데기’ 출범 우려

전부개정안 공청회 19일 개최 무산 ... 사실상 무기한 연기
“5월 2~3주내 5단계 과정 무리” 道·지역사회 강력 반발
김교홍 1소위원장 “내달 공청회 열면 6월 통과 문제 없어”

속보=국회가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공청회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본보 17일자 1면 보도)하며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월 한 달간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법 개정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름뿐인 ‘빈껍데기’ 출범 사태가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19일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공청회 연기=강원도와 국회,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소위원장:김교홍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19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의 공청회를 먼저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 공청회는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도·지역사회 4월 개최 강력 촉구=이어 강원도와 지역사회는 4월 내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청회 후 숙의기간을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까지 총 5단계의 과정을 2~3주안에 마쳐야 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달 중에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야 후속 일정을 밟을 수 있다. 강원도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며 “지난주 국

회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지원 토론회에서도 여야 지도부가 협조를 약속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에는 여야가 없다. 국회 일정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혁열 강원도지사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원특별자치도 지지를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선택과 집중이 중부내륙특별법에 쏠려 막막하다”고 밝혔다.

■강력 반발에 김교홍 위원장 “5월 내 통과는 가능”=강원특별자치도 법국민추진협의회와 강원도 49개 민간사회단체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4월 내 강원특별자치도 공청회 개최를 촉구했다. 최양희 법국민추진협의회장(한림대총장)은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고,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는 빈 껍데기인 채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김교홍 국회 행안위 1소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다음달 소위원회 공청회를 열고 6월까지 통과 되면 출범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단 심사가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부처와의 협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특별법 공청회 연기 도민 염원 무시 처사”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성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의 무기한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성토를 쏟아내고 있다.

강원도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회장:최양희 한림대총장·이하 범추위)는 17일 한림대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조속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추위는 “강원특별법은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 발의했고 지난 10일 개최된 국회 포럼은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지만 공청회가 기약없이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며 “4월 공청회가 무산되면 6월 강원특별자치도는 빈껍

데기인 채로 출범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도내 49개 민간사회단체도 공동 성명을 통해 “충북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각 지역의 선심성 특별법 제정을 남발하는 행태로 강원도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도민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유상범)은 논평을 내 “강원특별법을 1년 전 빈껍데기로 제정해 놓고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자가당착”이라며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별 특별법 제정만 남발하면 자칫 국회가 ‘요란한 빈 수레’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호기자 jyh89@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6월11일 전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특별자치도 출범일〉

국회 행안위 김교흥 민주당 간사
이광재 사무총장과 차담서 밝혀

속보=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17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은 이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과 의 차담에서 이같이 밝히며 당초 오는 19일 예정돼 있었던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공청회와 심사(본보 17일자 1면 보도)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북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올 3월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그에 앞서 충북지역의 현안인 중부내륙 특별법은 지난해 12월에 상정됐다”며 “전체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행안위의 소위원회는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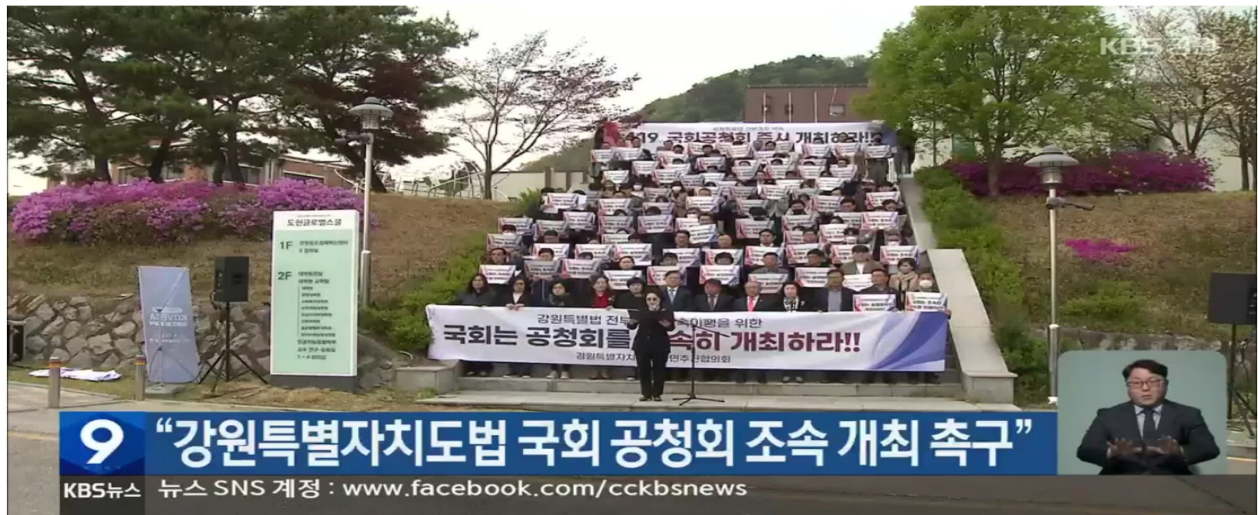
직도 일부 정부부처에서 강원도가 요구한 특례 반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 강원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줘야 한다. 소위 회의 일정이 늦춰진다고 해서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5월 초에 공청회를 열어 하순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차질 없이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게 된다”며 상임위 소위원회 일정을 재촉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법안 통과를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중앙정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이후에 이어질 전북, 충북 등 타 시·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방분권 시대에 중앙정부에서는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할 때가 됐다”고 강력 촉구했다. 서울=이하늘기자

KBS 춘천

2023년 04월 17일 (월)
강원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공청회 조속 개최 촉구”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국회 일정으로 차질이 우려되자,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법국민추진협의회는 오늘(17일) 춘천 한림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권혁열 강원도의회장도 올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하지 않도록, 강원도의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순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4월 중 강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촉구"

국민의힘 도당 "지역발전에 여야 없어...출범 전 통과돼야"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4월 중 강원특별법 공청회 개최 촉구" 국민의힘 도당 "지역발전에 여야 없어...출범 전 통과돼야"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일 전까지 통과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도내 정치권에서 즉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17일 강원특별법 개정안 논의 지연과 관련해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되고, 규제에 묶인 강원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밖에 없다"며 "이 상태라면 빈 껍데기로 출범하고 만다"고 우려했다.

이어 "오는 19일 중부내륙특별법과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늦어도 이달 중에는 공청회를 무조건 개최해야 한다"며 "5월로 넘어가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개정안 통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일 국회 포럼에서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개정안 통과를 약속했는데, 이 간절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권 의장은 조만간 국회 행안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과 만나 이달 중 공청회와 행안위 소위가 열리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곧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개정안은 출범 전에 통과돼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이 커진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김교흥 위원장은 지역 형평성을 내세워 충북지역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 강원특별법 개정이 우선 추진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법을 빈껍데기로 제정해놓고 나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강원도 발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anys@yna.co.kr

(끝)

소외 극복 '강원특별법' 또 소외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국회 행안위 소위, 중부내륙특별법 논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지연 불가피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빈 껌데기' 출범 우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조속한 법 통과" 촉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강원특별법, 강원도민 희망" 정치권 관심 당부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를 둘러싼 각종 규제, 이로 인한 정치-경제-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또 한번 '소외'되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회 행안위 소위에서 중부내륙특별법 논의를 우선하기로 잠정 결정해 강원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는 미뤄질 상황에 처했다. 4월 국회 공청회가 무산되면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상반기 중 불가능하고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역시 '구호'만 남게될 우려가 커진다.

관련 단체와 지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는 전 세계 유일의 남북 분단도로써 중첩된 규제와 국가의 지원에서 소외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300만 강원도민 모두의 숙원이었지만 2022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민의 희망과 달리 규제개혁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이양은 담지 못한 빈 껌데기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산림, 환경, 군사, 농업 4대 핵심 규제 개선과 강원형 미래산업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이례적으로 전체 국회의원 29%에 이르는 86명이 공동발의했으며 4월 10일 개최된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 포럼에는 여야 지도부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는 강원도민의 절박한 심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는 강원특별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한다"고 전했다.

강원도의회 역시 허탈감과 함께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자치도에 거는 강원도민들의 기대는 소외되고 낙후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라며 "이달에 법안이 꼭 국회에 상정되고 도민 기대대로 잘 풀려서 6월 11일 화합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지길) 의회를 대표해서 주장한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G1방송

2023년 04월 17일 (월)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범추협 "법안 심사 조속 촉구"

박명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와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는 오늘(17일)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약속도 신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권혁열 강원도의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심사와 공청회를 하기로 했지만 연기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오피니언 19면

매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이제는 막아야 할 때

의정칼럼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여로부터, 청명과 한식은 꺼져가는 생명을 두어도 새싹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물이 생동하는 절기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이 봄을 만끽하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매년 반복되는 불청객이 찾아온다. 바로 '산불'이다.

우리나라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고 강풍이 잦아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강원도 동해안의 경우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한번 산불이 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최근 10년 동안 전국 산불 총 5352건의 한 건당 피해 면적은 6.7ha인데 반해, 동해안 지역의 피해 면적은 64.6ha로 전국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많은 산림이 분포한 동해안의 산불피해는 그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1일, 또다시 강릉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관동팔경 중 하나인 경포대 주변 지역과 천혜의 해송을 품은 울창한 산림이 소실되었고, 무엇보다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50채 이상의 주택이 전소되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산불 현장에는 평균 풍속 15%, 순간 풍속 30%의 강풍이 불었다. 이는 130km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아 불은 민가를 비롯해 관광지까지 삽시간에 퍼져 총 379ha를 태우고 난 뒤, 때마침 내린 비와 관계당국의 빠른 대처로 진화되었고, 정부는 그 즉시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과 일터를 빼앗긴 이재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뜬눈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밤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운 재해를 막으려면 예방만이 최선이다. 동해안 산지는 급경사의 비탈과 소나무가 많고, 산림은 낙엽이 울창하여 산불에 취약하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먼저, 바람이 많이 부는 숲의 지형과 기후적 특징, 수형과 수종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산불예방 예산을 대폭 늘려 인력과 장비를 추가해야 하며, 저류시설과 관정시설 등 물 공급원을 확보해야 한다. 덧붙여, 마을과 문화재 주변에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을 확대 설치해 조기 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화재 후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방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부터 산불 진압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 준 소방관분들과 의용소방대분들, 강릉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진화활동에 앞장서 준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 군장병,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내일처럼 도움의 손길을 모아주신 강릉시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자원봉사자분들 덕에 감당하기 힘든 이번 재난을 조금씩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늘푸른 산천을 품은 아름다운 강원도 산림을 우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 강릉지역 산불진화와 복구에 힘써주고 계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17일 (월)
종합

[동정]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권혁열 강원도의회장은 18일 오후 6시 강원대 6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강원대 동문 조합장 당선 축하행사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인물동정 21면

◇권혁열강원도의회장은 18
일 오후 6시 강
원대 60주년기
념관에서 개최
되는 강원대 동
문 조합장 당선



축하행사에 참석.

박정하 의원, 원주서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 첫 개최



박정하 의원, 원주서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 첫 개최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갑)이 17일 강원 원주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 첫 번째 행사를 열었다.

이는 박 의원이 의정 활동과 성과를 보고하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역 숙원 사업인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과 흥업~지정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 등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 내용, 단계동 주요 현안 진행 상황 등을 주민에게 보고했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발의한 법안인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모빌리티 산업의 입법적 토대를 마련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시도 의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접수한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도 했다.

박 의원은 "찾아가는 의정 보고회를 통해 원주 읍·면·동을 순회하며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직접 논의하고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yangdoo@yna.co.kr

(끝)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지역 10면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개선 공사 이달 중 착수

【춘천】등·하교 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안전사고 우려를 샀던 춘천 불안초교의 통학 환경이 개선된다.

강원도의회는 춘천 불안초교 주변 이면도로에서 통학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공사가 이달 중 착수된다고 17일 밝혔다. 불안초교 통학로 개선 공사는 박기영 (춘천)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김보건·김지숙·유환규 춘천시의원, 춘천시, 춘천경찰서가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이어 왔다.

박기영 도의원은 “이번 통학로 개선 공사로 인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지역 10면

불안초 통학로 인도 설치 이달 착공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안전한 등하굣길 개선 다행”

춘천 후평동 불안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인도 설치 공사가 이달 말 시작된다.

박기영(사진)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원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 춘천경찰서가 협의를 시작한지 7개월



만에 통학로 개선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네차례 개최하는 등 차도와 인도 구분 공사에 대해 주민 설득을 벌여왔다.

박 위원장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며 “사고가 났던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불안초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통학로 개선공사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lofi@kado.net

춘천MBC

2023년 04월 17일 (월)
강원

춘천 불안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 공사 착수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춘천 불안초등학교 앞

도로 개선 공사가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불안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공사는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와 춘천시,

춘천시의회와 춘천경찰서가 협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착공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회 박기영 안건위 위원장은

불안초등학교 앞 이면도로는 학생들의

통행로조차 존재하지 않았었다며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교 이후 40년 만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확보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교통혼잡에 '안전사고 우려'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개선



춘천 불안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박기영 강원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등하교 때면 교통혼잡이 극심해 안전사고 우려를 샀던 춘천시 후평2동 불안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17일 박기영(춘천3) 강원도의원에 따르면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 차도와 분리한 인도를 설치하는 공사가 이달 중 착수한다.

이번 불안초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는 1984년 개교 이후 40년 만이자, 지난해 9월 박 의원과 춘천시, 춘천시의회 김보건·김지숙·유환규 의원, 춘천경찰서가 협의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이뤄진다.

박 도의원은 선거 당시 '어린이 안전 통학로 신설'을 첫 번째 공약으로 꼽았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4차례 주민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박 도의원은 "최근 대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불안초교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불안초교 앞 이면도로는 통행로조차 존재하지 않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공사로 인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CBS

2023년 04월 17일 (월)

강원

"안전한 등하교" 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협력 '성과'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박기영 강원도의원-김보건, 김지숙, 유환규 춘천시의원 공조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이면도로 인도 설치 확정



차량과 통학 어린이들이 뒤섞인 춘천 불안초등학교 이면도로. 박기영 강원도의회의원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강원도의회의원과 춘천시의회의원들이 협력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과 김보건, 김지숙, 유환규 춘천시의회의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춘천시, 춘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춘천시 후평 2동 불안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통학로는 차도,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인도 설치가 이번 달 중 착공한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저 또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번 통학로 개선공사로 춘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안전한 등하교" 강원도의회-춘천시의회 협력 '성과'

핵심요약

박기영 강원도의회원-김보건, 김지숙, 유환규 춘천시의의원 공조
춘천 불안초교 통학로 이면도로 인도 설치 확정



차량과 통학 어린이들이 뒤섞인 춘천 불안초등학교 이면도로. 박기영 강원도의회의원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강원도의회원과 춘천시의회의원들이
협력해 지역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나섰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과 김보건, 김지숙, 유환규 춘천시의회의원들은 지
난해 9월부터 춘천시, 춘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춘천시 후평 2동 불안초등학교 통
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통학로는 차도,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의원들과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인도 설치가 이번 달 중 착공한다.

박기영 의원은 "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자에 의
한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저 또한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번 통학로 개선공사로 춘천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
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타 엔사이드, 신아일보 등 40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4면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추경 심의 17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 도농정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윤길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선거 03면

태양광 경관 저해 논란 춘천 봉어섬 현지 시찰

도의회 활용 방안 논의

속보=강원도의회가 태양광발전 단지 경관 저해 논란이 일었던 춘천시 봉어섬(본보 3월9일자 2면 보도)을 찾아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는 18일 강원도와 춘천시 의암호 봉어섬을 현지 시찰한다.

앞서 도는 환경 규제에 의해 봉어섬 개발이 어려워지자 민간사업자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추진, 2012년부터 전력을 생산해 왔다. 발전시설은 2027년 무상 임대만료되면 도 직영으로 전환돼 연간 30억여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삼악산케이블카 개장 이후 경관 저해 논란이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는 당초 투자 계획대로 관광·체험 교육이 가능한 친환경 조경 조성사업 착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도 역시 봉어섬 야간 경관 개선과 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검토해 왔다. 정윤호기자 jyh89@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4면

도의회 “김 지사 골프연습 논란, 보좌진 직언 부족 문제”

연가신청 사후 작성 보도에
“공무집행방해 해석 가능” 비판
집행부·의회 소통문제 지적도

‘김진태 지사 산불중 골프연습’ 논란과 관련해 강원도의회가 도지사 정부 보좌진에 “직언 좀 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17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대변인실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 ‘김 지사 골프’ 논란을 두고 ‘비서실장부터 대변인 등 정부직의 문제라고 본다’며 “직언 좀 해라. 지사한테 직언하는 분들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도 “지사가

연가신청을 사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반대로 해석하면, ‘내가 지사인데 무엇인들 못하느냐’는 것이다.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짚었다.

조례 심의 부재를 이유로 도청 강릉 2청사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줄이 삭감되고 있는 것을 두고 박관희(춘천) 의원은 “집행부가 사서 의회와 갈등구조를 만들고 있다. 의회의 역할을 인정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행부가 상임위 삭감 예산을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과 기관공통경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소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며 “여기서 끝나면 그만인지, 의회와의 관계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대변

인실의 소통 조율을 언급했다.

사문위는 보건체육국 추경예산 중 국제 자동차 대회인 ‘강원국제모터페스타’ 개최지 원비 1억4588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은 사업종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2020~2022년 각 해 사업 정산서가 지난달 말 일괄 제출됐다.

심오섭(강릉) 의원은 “작년에 1억7500만원, 지원 내역을 보니 4월간 가장 임차료라며 ‘보조금 정산도 안한 단체에 상당한 특혜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은 “정산까지는 확인을 안해봤다. 파악하겠다”고 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인물 23면



강원여성100인회는 17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에 힘모으기로 했다.

강원여성 100인회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힘 모은다

정기총회 열고 의지 다져

강원여성100인회(이사장 한경숙)는 17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김진태 도지사 부부와 노웅호 국회의원, 안정희 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계식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전금순 도여성특보, 김숙영 도여성가족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에 힘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어 도여성단체협의회와 공동협력 약정행사를 갖고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및 취약계층 권익증진 등에 함께하기로 했다.

유순옥 도의원과 최계숙 철원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순옥 아이코리아 도대표지회장은 단체에 가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 이재민을 위해 회원들이 모은 성금 200만 원도 김지사와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강주영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1면

윤 대통령 “강릉산불 피해복구 지원 만전”

주례회동서 산불 대책마련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매년 봄반복되는 동해안 산불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강릉산불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만전

을 기하라”고 재차 지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에 앞서 “여제강릉 대규모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상황 및 이재민 피해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면서 윤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4대강 보(淤) 활용과 관련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강 보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약속한 게 이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차

원에서 특정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궁창성 ▶관련기사 2·12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피해조사 24일 완료·200억원 긴급 투입 소상공인 지원



강릉 대형산불

김 지사 기자회견담회 지원방안 발표
공공·민간 망라 임시숙박 대책 심혈
한전 전신주 지중화 전향적 자세 촉구

강릉 산불피해 실태 조사와 관련, 강원도는 19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와와의 합동 2차 조사는 2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가진 기자회견담회에서 강릉 산불 피해 대응 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후속조치가 진행된다”며 “19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하고 행안부와와의 합동 2차 조사를 24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재민들이 계속 체육관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임시 숙박 대책에 총



김진태 도지사는 17일 도청 기자회견실에서 강릉 산불 피해 대응 계획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영

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H 임대주택과 KIST 강릉분원 숙소, 주거형 숙박업소 등 공공·민간 시설을 총망라해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피해 주민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강릉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하고, 이자 2%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7000만원을 긴급 특별 융자해주는데 들어가는 이자 2%도 부담할

방침이며, 불에 탄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내는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등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 주민의 주택과 자동차 등 취득세를 면제하고 지방세의 신고·납부·징수 등을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김 지사는 “전국 지중화율이 20%대인데 강원도는 10%이고, 강릉은 3%대밖에 안 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전신주 지중화(地中化)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멀리서·가까이서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이재민 응원 편지·구호 물품 잇달아
강릉시 “피해 큰 만큼 관심 지속 부탁”

강릉 대형산불 이재민들의 신속한 재기를 바라는 응원 편지와 구호 물품이 잇따르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7일 강릉시에 따르면 전국의 각계 각층 국민들이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응원 편지와 구호물품 등을 산불 이재민 대피소로 보내오고 있다.

지난 주말 대피소에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 음료수와 함께 편지 두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는 “불나서 어땠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 걱정마요. 나마징가 Z슈퍼 ○○이가 다 해결할게요! 스틱스강에 맹새(세)할게요”라며 “그까짓 불따위 겁내거나 무서워하거나 밀리면 안되요! 힘내세요!”라는 한 어린이의 순수한 응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아이의 부모가 쓴 또 다른 한 통의 편지에는 “수시로 관계기관에 문의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한 서울시민은 편지와 함께 비타민, 진통제 한 상자를 보내왔다. 편지에



어린이가 보내온 산불 이재민 응원 편지

는 “이번 강릉화재로 인해 피해 입으신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와 마음의 피해가 심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작으나마 저의 정성을 보내드리오니 필요한 곳에 사용해주세요”라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국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고 있다”며 “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연재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2면

도내 전신주 지중화율 10.6% 전국 평균 절반

속보=동해안 대형 산불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신주 지중화(본보 17일자 2면 보도)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역의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일부 시·군은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지중화율은 10.6%로 전국 평균(20.1%)의 절반에 불과하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광역자치도 가운데 전남, 경북과 함께 최하위권이다. 면적 등으로 인해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서울과 광역시의 평균 지중화율은 40.3%에 달한다.

강릉·고성 산불 원인도 전신주... 동해안 지중화 시급
지자체 부담비용 해결 우선... 김 지사 한전 압박 나서

시·군별로 들여다보면 더욱 열악하다. 특히 강원도 내 군 지역은 대부분 지중화율이 한 자릿에 머물고 있다. 우선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은 16.2%로 춘천(22.56%), 원주(22%)에 못 미친다. 2019년 전신주 화재가 산불로 번져 큰 피해를 입은 고성군은 11.55%(속초시와 통합 집계)에 불과하다.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는 지중화율이 한 자릿수다. 철원의 경우 1.59%, 평창은 2.32%에 그치고 있다. 대형 산불에 가장 취약한 동해안 시·군 중에서는 삼척이 9.48%로 가장 낮다.

이처럼 강원지역의 지중화율이 낮은 것은 비용 탓이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국·도비 지원 없이 한국전력공사와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열악한 시·군의 재정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지중화 사업은 불가능하다. 국·도비 지원 역시 근거가 없다. 한전이 지난해 32조원의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중화 사업이 더 축소될 가능성도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동해안 전신주 지중화 확대를 건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한전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전신주로 인한) 고성 산불이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정말 문제”라며 “국민으로부터 전기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업이 이런 재난에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복구를 마치면 지중화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중화율이 20%대인데 강원도는 10%대라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설 가능성도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동해안 전신주 지중화 확대를 건의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한전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전신주로 인한) 고성 산불이 4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정말 문제”라며 “국민으로부터 전기료를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업이 이런 재난에 나몰라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 복구를 마치면 지중화 사업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 지중화율이 20%대인데 강원도는 10%대라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The JoongAng

2023년 04월 18일 (화)

충청/강원 20A면

“산불 피해 도우려면 관광 와달라” 강릉 횃집 사장의 호소

이달 예약 600명 불 나자 “취소”
산불 후 KTX 강릉선 승객 12%↓
봄 대목 기대했던 상인들 한숨만
시 “강릉 방문이 최고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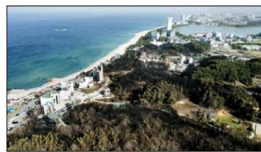
지난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 뒤 첫 휴일인 16일 경포호 일원은 관광객의 발길이 줄어 한산했다. 잿더미로 변한 주택과 산림, 펜션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주말과 휴일이면 관광객이 북적이는 경포 해변 주변은 웃음소리와 환호가 사라졌다. 대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자리를 떠나는 이들의 발길만 이어졌다.

강도(40·여)씨는 “경포 해변 주변은 늘 밝고 활기찬 곳이었는데 시커멓게 탄

소나무와 가라앉은 분위기를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산불로 펜션 등 숙박업소가 사라지면서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경포호 일원은 숙박시설 7곳이 소실됐고 15곳은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를 겨우 피한 숙박시설도 연기가 내부로 스며들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형호텔 객실 예약률이 평소보다 20%가량 줄어든다고 펜션 등에선 예약 취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경포 해변의 한 호텔은 예약객실의 41%, 15일엔 27%가 취소됐다. 인근 리조트도 지난 주말에만 예약한 객실 20%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실제 강릉시 KTX 이용현황을 보면 산불 전후 주말을 비교한 결과 지난 7~9일 3만1076명에서 14~16일 2만7431명으로 3645명(11.7%)이 감소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산불로 강릉시 경포 일원 산림 등이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있다. [중앙포토]

음식점들도 예약 취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강릉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최모(61)씨는 이달 말까지 600여 명분을 예약받았지만, 산불로 모두 취소됐다. 손님들이 “불이 난 곳에서 관광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최씨는 “강릉은 준성수기인 4~5월에도 해변과 송림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북적였지만, 산불로 여행을 취소하는 분

이 많다”며 “반대로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강릉을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도 산불 여파로 관광산업 침체가 우려되자 관광객 유치에 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산불 피해지역 강릉, 관광이 최고의 자원봉사입니다’란 캠페인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지난 13일 강릉시 민사화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13~16일에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 강릉관광을 홍보했다.

이석재 강릉시 관광마케팅 담당은 “강릉은 관광이 제1 산업일 만큼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며 “선교장과 오죽헌·경포대·경포

해변으로 이어진 산불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복구해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공문을 보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주최 행사를 강릉에서 열 수 있도록 요청했다.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민간기업에도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강릉 관광 특별기획전도 진행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관광과 지역 방문이 산불로 침몰하는 강릉을 돕는 최고의 자원봉사”라며 “피해수습과 함께 관광 촉진 캠페인을 이어가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호·최종권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6면

교원 수 감축 계획 논의

강원도내 교육계 반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강원도내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원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해 강원도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협의회 이후 발표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지역 간 상이한 교육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계적으로 신규채용을 조정,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교원감축 입장을 밝혔다.

강원도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줄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논리에 따라 수급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교육의 질 확보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지역은 더 크게 피해를 볼 것이다. 정규교원이 충원돼야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도교육청 공약실천 평가 최우수
종합결과 90점 이상 획득 전국 5곳

강원도교육청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진행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 평가’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서를 토대로 △강

2023년 04월 18일 (화)
종합 06면

충성 △민주성 △투명성 △공약 일치도 등 4개 분야를 심사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종합평가 결과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해 SA등급을 받았다. SA등급을 획득한 곳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 총 5곳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도민과 약속한 공약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강원교육, 강원도교육청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정순신 청문회 여파 도교육청 홈페이지 비판 쇄도

2023년 04월 18일 (화)
사회 04면

게시글 50여건 평소 대비 10배

속보=국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 개최(본보 17일자 4면 보도) 이후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몸살’을 앓고 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강원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17일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정책제언’ 게시판 등에는 도교육청 및 소속 직원들을 비판하는 글이 50

여건 넘게 올라와 있다. 평소 해당 게시판에는 한 달에 3~4건의 글이 올라오는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지켜봤던 이들이 홈페이지에 찾아오면서 평소보다 10배 넘는 글이 게시된 것이다. 대다수의 게시글은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특정 인사를 비롯해 도교육청, 학교의 부적절한 대처를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척 조심스러운 사안이라 어떤 말씀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지역 10면

춘천 교육도시 연계 WT본부 유치 사활

<세계태권도연맹>

오늘 현장실사 육 시장 동행
프레젠테이션 등 당위성 강조
1만3000명 지지 서명부 전달

‘평가단의 마음을 잡아라.’

세계태권도연맹(WT)본부 유치 제안평가단이 18일 춘천 현장실사를 진행, 춘천시가 현장실사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다.

17일 본지 취재결과 WT본부 유치 제안평가단은 18일 춘천 현지실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진태 도지사와 육동한 시장, 조정원 WT총재와 평가단 등이 참석한가

운데 환영 차담을 갖고 이후 오후 1시 40분부터 본부 유치 제안 프레젠테이션과 예정지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평가단은 이날 삼악산 호수케이블카에 탑승해 본부 예정지인 수변동 야외데크와 시 전경도 함께 조망할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춘천이 가진 장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레젠테이션, 케이블카 탑승, 현장실사까지 모든 일정에 육동한 시장도 동행해 당위성을 강조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WT본부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다.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육동한 시장은 춘천이 세계태권도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태

권도와 민선 8기 비전인 교육도시를 연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육 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태권도가 일상화 되고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좋은 인성을 가질 수 있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안목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의 염원도 함께 담았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유치 지지의사를 평가단에 전달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달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1만 3000여명의 서명부를 받았다.

오는 8월 열리는 강원·춘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역시 WT 본부를 유치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경기는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육타곤 다이아몬드게임·시범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되며 육타곤다이아몬드게임과 비치선수권대회의 경우 WT 주최 G4등급·G2등급의 대회로 세계랭킹 포인트도 주어진다.

시관계자는 “춘천시는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도시로 본부 유치를 통해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포츠 교육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와 함께 경쟁을 펼치는 경기 김포시는 오는 19일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WT측은 양측의 유치제안서를 평가한 뒤 오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지역 16면

철원 올 상반기 선수단 1만2천명 온다

이달 태권도대회 4천명 등
6월까지 12개 대회 유치
음식·숙박 등 상경기 활력

【철원】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제33회 용인대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가 지난 12~22일 11일 동안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진행 중이다. 용인대와 대한태권도협회, 강원도태권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군과 철원군의회, 철원군체육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4,3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 등이 참가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



◇철원군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선수 4,300여명이 참가하는 제33회 용인대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인 선수단은 대회가 치러지는 철원실내체육관 인근을 포함해 갈말읍과 동송읍, 김화읍 등 지역 곳곳의 음식점을 방문하

고 있다. 또 펜션과 모텔 등 지역 숙박업소도 대규모 선수단을 맞이하는 등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군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총 12개의 크고 작은 스포츠대회를 유치, 6월까지 1만2,000여명 이상의 선수단이 철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대회 참가자들을 통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는 등 철원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용탁 군 문화체육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10개 이상의 대형 스포츠대회를 철원에서 개최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mantough@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사설/칼럼 19면

이재민 건강 관리 만전을

-임시대피소 고령자·만성 질환자 진단 필요

지난 11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한 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은 시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대부분 화재 당시 입고 있던 옷이지만 입은 채 대피해 불편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건강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가 뒤따라야 합니다. 집단 생활에 따른 위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재민들의 고단한 생활은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임시대피소가 마련된 강릉 아레나에는 텐트 140여동이 설치돼 290여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는 녹색도시체험센터 등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습니다. 임시주거 거주자는 170가구 380명 안팎입니다. 지난 주말·휴일 이재민들은 급식·간식 지원과 샤워·세탁 지원, 의료·심리 지원 등 자원봉사 활동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류와 의약품 등을 집에 두고 온 경우가 많아 생활 리듬을 찾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의 경우 건강 악화가 우려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한 이재민은 한쪽 다리를 아예 사용하지 못해 화장실을 다녀오기

도 힘들었고, 몇몇 어르신은 틀니 등 개인 의료용품을 챙기지 못해 식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생활 불편까지 겪으면 서상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가 며칠 이내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선 산불 피해 조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현장 잔해물을 철거하고 임시 주택 희망자 수요조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때문에 대피소 운영은 5월까지 계속 될 전망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한 이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주와 보상 대책에 대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상을 보이는 대피자를 즉시 진료하고, 고령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산불로 가족이 소실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을 입은 피해자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전문 의료진의 심리 치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시 생길지 모를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사전 위생 점검과 소독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4월 18일 (화)
사설/칼럼 19면

특별자치 하지 말라는 것인가

-법안심사 안건 누락 강원도민 좌시하지 않을 것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이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업무 추진 근거인 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아 비상이 걸렸습니다. 4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 심사안건에 '강원특별자치도 법 전부개정안(이하 강특법 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어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공정회와 본회의 상정 등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행안위 측은 강특법 개정안은 올 2월에 발의돼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임위안건으로 상정된 반면, 2022년 발의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계속 계류돼 왔기에 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 논의키로 했다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공감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6월 11일 출범을 앞둔 강원도 입장에서 법 개정이 늦어지는 사태가 끼치는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지난 몇 달간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공공캠페인을 전개하며 강원도에 힘을 실어온 도민은 이번 법안 심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일정 연기 소식에 충격이 큼니다. 당초 예정한 국회 상임위 일정도 지켜내지 못한 강원도와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에 강원도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일 행안위안건에 충청권의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은 포함되는데 비해 강특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남으로써 강원도의 미흡한 대응이 차질을 부른 것은 아닌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상임위 심의, 공정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5월은 커녕 6월 출범 전 통과도 어렵지 않느냐는 암울한 전망에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출범 이전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강원도가 희망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에 대해 중앙정부의 긍정적인 결단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난관을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려면 중앙정부가 더 솔선해야 합니다. 타 시도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처 권한과 규제 사항 등에 대한 결정권을 대폭 이양하지 않는다면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중앙부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시기가 됐다고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원도와 부처 간 이견 조정에 앞장서야 합니다. 강원도민 분노가 고조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양측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 지원에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특별법’, 자치도 출범 전 반드시 통과돼야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와 권한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6월11일 자치도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문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법안 심사가 당초 19일에서 무기한 뒤로 밀릴 위기에 놓였다는 데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충북지역의 현안인 중부내륙특별법을 먼저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행안위 1소위는 중부내륙특별법(2022년 12월 발의)이 강원특별법 개정안(올 2월 발의)보다 두 달 빨리 발의된 점, 강원특별법이 개정안인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제정법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1소위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전 국민이 잘사는 국가를 위해 지난 40여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 일극 현상은 오히려 심화돼 왔다. 이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국가경영 시스템의 대전환과 이를 위한 과격적인 자치분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 ‘균형발전이라는 국토공간의 공정’을 함께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 필요한 일을 지방이 주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정권 등을 충분히 보장, 지방정부라 불리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특별자치도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 국회는 이런 점을 감안,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어느 법률안보다 먼저 심의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국회는 법안 심사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강원도가 모처럼 특별자치도 실현으로 자생력을 가지려

는 지금 입법으로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강원도의 특별자치도에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안 심의를 후순위로 놓는 것은 법안 심의의 원칙과 기준

작년 12월 발의된 중부내륙특별법 먼저 심의
법안 심사 당초 19일에서 무기한 밀려
국회,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지원할 때

이라는 상황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조치로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 심의의 원칙과 기준은 일도양단식으로 해석될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잡음을 막는데 법안 심의의 원칙과 기준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지역의 발전과 민생의 안정에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즉, 법안 심의의 원칙과 기준의 당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지역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따라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조기에 심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江原日報

2023년 04월 18일 (화)

사설/칼럼 19면

청소년 27.3% 우울증 경험, 어른들 잘못은 아닌가

강원지역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이 심각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및 ‘2022년 학생건강검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학생 및 고교생 1,935명을 분석한 결과 27.3%가 우울감을 경험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간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이미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도내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치열한 학력경쟁 사회에서 성장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이 허용 가능한 스트레스 범주를 벗어나 있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기 우울증은 어른들과는 다르다. 때로는 짜증을 심하게 내기도 하고 아예 입을 닫아 버리거나 식사를 안 하기도 한다. 게임에 빠져 방에서 두문불출하거나 학교에 잦은 지각과 결석, 등교 거부를 한다. 문제는 이를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다. 자녀의 행동, 말, 식습관 등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다행히 자녀가 학교 상담실이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호전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모의 역할이다. 아이들이 건네는 말 중에

앞서 평소와 다른 징후들이 느껴지면 “이상한 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 줘야 한다. 가까이에서 자녀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며 힘들 때 기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충고, 질타, 요구, 평가절하는 결코 대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뿐이다. 우울증은 짧은 시간 안에 악화돼 위험한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부모가 정신과를 방문하거나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도내 청소년 넷 중 하나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대로는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청소년 모두가 자신의 삶에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지역의 앞날도 밝다. 이는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잘못이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고민해야 한다. 우울증을 겪는 학생을 문제아로만 취급하지 말고 함께 돌봐야 한다.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쯤 겪는 ‘성장통’이라고 치부하고 넘겨서는 안 될 일이다.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